

SK, 경영권 다툼 “정면돌파” 선언

SK 이사회, 임시주총 개최 요구 거부 ... 소버린과 법정공방 불가피

최근 소버린자산운용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SK 이사회가 소버린측의 정관 변경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개최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소버린측은 곧바로 유감을 표명하며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밝히기로 해 양측의 경영권 다툼이 소버린의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을 통해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SK 이사회는 11월5일 서울 종로 SK 본사의 이사회 회의실에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소버린측의 임시주주총회 개최 요구안을 참석이사 8명 전원의 반대로 부결시켰다. 최태원 회장과 유정준 전무 등 사내이사 2명은 불참했다.

소버린은 10월25일 기소중인 최태원 SK 회장의 이사 자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형사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이사의 자격을 박탈하고 기소된 이사는 형의 선고가 확정될 때까지 직무수행을 정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정관변경을 위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이사회 사무국장인 황규호 SK CR전략실장은 이사회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주요 주주의 법적 권한을 존중해 심도 깊게 논의했지만 2004년 3월 정기주주총회 부결된 안건과 본질적으로 동일해 <3년 동안 동일제안 반복금지>라는 증거거래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이어 “기소 후 직무정지를 규정하는 안건은 2005년 정기주주총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논의할 시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회사와 주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여러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고 법적인 이슈가 있는 만큼 대형 법률법인 3곳의 자문을 통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소버린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사회가 독립성을 천명하고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는 것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그러나 이사회가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밝힐 예정”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소버린측이 이사회를 무조건 수용하기보다는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을 제기해 양측의 다툼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태이다.

소버린이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을 내더라도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 사태가 일단락되겠지만 받아들일 때에는 SK 이사회가 다시 이사회를 소집해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더라도 소버린측이 요구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참석 주주의 2/3 이상 찬성과 전체 의결권의 1/3 이상 찬성 요건을 동시에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화학저널 2004/11/08>